

2020 군무원9급 행정학 기출문제 (2020.07.18 시행)

[출제평] 2020 군무원 행정학 출제를 보고

지난 7.18 시행된 2020 군무원 행정학은 행정학 출제사상 최악의 출제였던 것 같습니다...ㅠㅠ 과거에도 군무원시험에서는 간혹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었지만 이번에는 특히 문제의 질이나 발표된 가답안 내용을 볼 때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을 허탈하게 만든 황당한 출제였습니다.

행정학을 지도하고 가르친 제가 도리어 수험생들한테 미안하고 민망할 정도로 이번 출제는 최근 행정학계의 이슈와는 동떨어져있는 오래된 변방 주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을 뿐 아니라 복수정답이나 정답없는 문제도 무려 4문제나 되었습니다. 후 국내 그 어떤 선생님도, 군무원 전문싸이트에서도 발표된 가답안에 그저 충실한 해설을 내놓을 때 저는 발표된 가답안에 도전, 수험생들을 대신하여 밤을 꼬박 새워가며 고민 끝에 국내유일하게 출제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한 해설을 7.21 학생들에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8.14 최종적으로 4문제가 복수정답 내지는 정답없음으로 처리발표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천만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아쉬움이 남는 출제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였고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고 좋은 문제가 출제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중규

01. 행정학의 기술성과 과학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왈도(D. Waldo)가 'practice'란 용어로 지칭한 기술성은 정해진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하는가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 ② 윌슨(W. Wilson) 등 초기 행정학자들은 관리기술이나 행정의 원리 등을 발견하려는 데 초점을 두고 행정학의 기술성을 강조하였다.
- ③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학 연구에서 처방보다는 학문의 과학화에 역점을 두고 가설의 경험적 검증 등을 강조했다.
- ④ 현실 문제의 해결은 언제나 과학에만 의존할 수 없으므로 행정학은 기술성과 과학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답] ① 최근 행정학계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지 않는 고전적인 문제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체감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성을 practice라는 용어로 지칭하며 정해진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하는가의 방법을 의미한다고 본 학자는 Waldo가 아니라 행태과학자 Simon이다. Waldo는 기술성을 Art 또는 Profession으로 보면서 행동의 활동자체나 처방·치료하는 실천적 행위로 정의한다.

- ☑ ② [O] W.Wilson의 행정학연구 (1887) 논문 이후로 초기의 행정학은 관리기술이나 원리의 발견에 치중하다 보니 자연히 기술성 위주의 행정학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과학적이라는 용어를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행정학의 과학성이 아니라 사실상 기술성이었다.
- ③ [O] Simon등 행태주의 학자들은 실천적인 처방보다는 과학화에 역점을 두고 논리실증주의에 의한 경험적인 검증을 강조했다.
- ④ [O] Presthus는 현실의 문제는 기술성과 과학성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정치·행정 이원론	과학성	보편성	가치중립성· 가치맹목성
	가치를 배제하고 객관적·경험적 지식 탐구	여러 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칙 추구	
정치·행정 일원론	기술성	특수성	가치지향성· 가치합목적성
	가치지향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전략 탐구	정치체제별 특수한 맥락 속에서 이해	

☞ 2020 9급 선행정학 p.

02. 디мок(M. Dimock)의 사회적 능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이다.
- ② 행정의 사회 목적 실현과 관련이 있다.
- ③ 경제성과 연계될 수 있는 개념이다.
- ④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추구한다.

[답] ① 출제 오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①뿐만 아니라 ③④도 엄밀하게는 기계적 능률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옳은 지문을 찾은 문제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①이 최종 정답으로 처리되긴 하였으나 논란의 여지가 남게 될 문제이다). 출제자는 사회적 능률을 넓은 의미로 능률로 보고 가장 거리가 먼 ①을 최종 정답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 ① [X] 디мок(M. Dimock)의 사회적 능률은 사회적 형평성이 아니라 기계적 능률을 보완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사회적 능률성은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계기로 기계적 능률을 비판하면서 통치기능설(정치행정일원론)에 의하여 제시된 새로운 능률이 사회적 능률이며, 사회적 형평성은 1960년대말 격동기 미국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행정론자들에 의하여 주창된 이념이었다. 따라서 사회적 능률성과 사회적 형평성은 직접 관계가 없다.

② [O] (논란될 수 있음) 사회적 능률은 돈이나 수치만을 가지고 능률을 측정하는 기계적 능률과 달리 사회목적의 실현, 인간적 가치의 구현, 다원적 가치의 통합 등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능률개념이다.

③④ [O] (논란될 수 있음) 경제성(비용과 시간 등 투입의 절감 여부)과 연계될 수 있는 개념은 사회적 능률보다는 기계적 능률에 가깝고 ④의 최소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추구하는 개념 역시 일반적(전통적)인 능률개념으로서 기계적 능률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출제자는 사회적 능률 역시 넓은 의미로 능률로 보고 가장 거리가 먼 ①을 최종 정답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 기계적 능률과 사회적 능률

구분	기계적 능률	사회적 능률
행정이론	과학적관리론(1880), 관료제이론	인간관계론·통치기능설(1930~1940)
유사개념	대차대조표적 능률, 수치적 능률, 금전적 능률, 물리적 능률, 양적 능률, 단기적 능률, 물가치적 능률, 객관적 능률, 사실적 능률, 경제적 능률, 좁은 의미의 능률성	인간적 능률, 대내적 민주성, 상대적 능률, 장기적 능률, 발전적 능률, 가치적 능률(가치와 능률의 조화), 질적 능률, 합목적적 능률, 넓은 의미의 능률성
대두요인	행정기능의 확대·변동 및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	과학적 관리론 및 인간의 기계화에 대한 노조측 반대
비판	인간적 가치 무시	능률의 본질을 애매화, 자원낭비에 대한 변명 구실
학자	Gulick(능률과 절약이 행정의 기본적인 善)	E.Mayo, M.E.Dimock

03. 레비트(H. Levitt)가 제시하는 조직 혁신의 주요 대상 변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업무
- ② 인간
- ③ 구조
- ④ 규범

[답] ④ 레비트(H. Levitt)가 제시하는 조직혁신의 주요 대상변수로는 업무, 인간, 구조, 기술이 있다. H. Levitt은 이들 네 가지 변수를 지렛대(대상변수)로 사용하여 조직을 혁신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규범은 해당하지 않는다.

□ 조직혁신의 대상변수(Levitt)

구조	공식적인 기구나 제도 등을 개혁 (RS, 분권화, 명령체제 등)
인간	구성원의 가치관이나 행태, 문화를 개혁 (감수성훈련 등 OD)
업무	조직이 수행하는 과업이나 업무 자체를 개선
기술	과정, 기술, 장비 등 일의 흐름과 절차를 개혁 (RE)

0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에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치구
- ②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
- ③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 ④ 특별자치도

[답] ②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는 사무배분에 있어서 어떠한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 ☑ ① [O] 자치구는 시·군보다 세목의 수가 작고 자치권의 범위도 제한되며, 지방교부세도 직접 교부받지 못한다.
- ③ [O] 인구 50만 이상의 특별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시를 둘 수 있으며, 그 경우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주민감사 청구 서명인원도 다른 기초자치단체(200명)와 달리 인구 300명이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이다.
- ④ [O] 특별자치도는 다른 도와 달리 자치경찰제 시행, 인사청문회 실시, 특별일선기관 우선 통합·정비 등 특별법상 다양한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05. 행정학에서 가치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학문적 계기로 옳은 것은?

- ① 신행정론의 시작
- ② 발전행정론의 대두
- ③ 뉴거버넌스 이론의 등장
- ④ 공공선택론의 태동

[답] ① 1960년대 말 미국의 격동기시기에 빈곤, 차별, 소외, 폭동 등의 절박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신행정론은 가치중립적인 행태론을 비판하면서 행정학은 실천성(action)과 적실성(relevance)을 토대로 가치와 정책을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신행정론은 가치지향주의, 규범지향주의, 정책지향주의라고 불리운다.

□ 신행정론의 주요 특징

- ① 사회적 형평 등 행정의 새로운 가치 중시 - 가치주의, 인본주의 행정학
- ② 격동의 대응과 행정의 독립변수적 역할 및 적극적 가치관 중시 - '관조'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자로서의 '실천'하는 적극적 행정인 중시, 적실(relevance)과 실천(action) 강조
- ③ 정책 및 문제지향성 - 정치행정신일원론
- ④ 행태론의 지양과 현상학적 접근법 추구 - 간주관성 및 능동적, 사회적 자아 중시
- ⑤ 과학적 방법을 포기(배격)한 것은 아님 - 과학적 지식을 문제해결에 활용할 것을 주장
- ⑥ 사회적 적실성·기술성(치방성)·대응성 강조
- ⑦ 후기관료제모형 - 계층제의 타파로 민주적·동태적·도덕적·분권적·다원적 조직 주장
- ⑧ 고객지향적 행정과 민주적 행정 모형 강조 - 수익자의 참여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06. 사이먼(H.Simon)의 정책결정만족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이먼(H. Simon)은 합리모형의 의사결정자를 경제인으로, 자신이 제시한 의사결정자를 행정인으로 제시한다.
- ② 경제인은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행정인은 만족하는 선에서 그친다.
- ③ 경제인은 합리적 분석적 결정을, 행정인은 직관, 영감에 기초한 결정을 한다.
- ④ 경제인은 복잡하고 동태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만 행정인은 실제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무작위적이고 순차적으로 대안을 탐색한다.

[답] ③ 사이먼(H.A.Simon)이 주장한 의사결정의 만족모형은 합리모형과 달리 의사결정자를 경제인이 아닌 행정인으로 가정하며 따라서 최선의 합리성 보다는 제한된 합리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직관이나 영감에 기초를 둔 의사결정은 사이먼의 만족모형이 아니라 Dror가 주장한 최적모형에서 중시하는 의사결정기준이다.

□ 합리모형과 만족모형의 비교

구분	합리모형	만족모형
초점	정책결정 자체에 초점	인지능력의 한계에 초점
합리성	완전한(객관적) 합리성	제한된(주관적) 합리성
접근	규범적·이상적 접근	현실적·실증적 접근
선택기준	최선의 대안	만족스러운 대안
범위	모든 대안과 모든 결과 고려	중요한 대안과 중요한 결과만 고려
인간관	경제인	행정인

□ 경제인과 행정인

	경제인	행정인
관련이론	과학적 관리론	행태론
의사결정	합리모형	만족모형
목표달성	극대화	만족화
합리성	최선의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고려상황	복잡하고 동태적인 모든 상황	단순화된 상황
고려대안	모든 대안	무작위적·순차적 대안

07.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성의 침해
- ② 서비스 품질의 저하
- ③ 경쟁의 심화
- ④ 행정책임 확보의 곤란성

[답] ③ 약간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경쟁의 촉진은 민영화의 장점이 되지만 경쟁의 심화는 문제점이 될 수 없고,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 맡기면 지나치게 영리(이윤) 추구에 만 치중하여 공공성이 손상되고 서비스의 수준도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오석홍)이 있다. 가답안으로 발표된 정답③은 출제자의 이러한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의 논리도 성립이 가능하다.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할 경우에 경쟁의 촉진으로 서비스의 품질은 오히려 향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경우 정답이 ②가 될 수도 있다.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정답이 결정되었지만 논란의 여지는 남게 될 문제이다(최종정답은 ③으로 처리되었다).

■ 민영화의 필요성과 한계

필요성(찬성론)	한계(저해요인)
①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	① 책임성의 저하
② 정부규모의 적정화	② 역대리·민간부패 - 정보격차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
③ 근린행정의 구현	③ 형평성의 저해 - 약자 배려 소홀
④ 전문성 제고	④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저해 : 공공성의 저해 및 서비스 수준의 저하
⑤ 서비스의 질 향상	⑤ 요금의 저평성 저해
⑥ 민간경제의 활성화 - 자본시장의 저변 확대	⑥ 크립탈취 - 흑자 공기기업만 인수하려는 경향
⑦ 정부재정의 건전화	⑦ 황금주 문제 - 중요지분 유지 성향
⑧ 보수인상 요구의 자제	⑧ 노조 및 주주관청의 반대
⑨ 복대리로 인한 누적적 비효율 극복	

08.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과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통해 포기한 액수를 조세지출이라 한다.
- ② 지방재정에는 지방세지출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 ③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 ④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국가에 보고한다.

[답] ②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감면 내역을 예산에 포함시켜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하자는 제도로 우리의 경우 2011년 중앙정부와 2010년 지방정부(지방세지출보고서) 도입하였다.

■ 조세지출예산

- 조세지출
 - 간접지출, 경직성 높음, 투명성 낮음, 숨겨진 보조금
- 조세지출예산
 - 서독에서 1967년 처음 도입
 -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조세지출보고서 작성, 2011년부터 정식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
 -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효과, 형식은 조세이지만 실질은 지출 = 숨겨진 보조금
 - 조세감면의 집행을 국회차원에서 통제하자는 것

09. 에치오니(A. Etzioni)의 조직목표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질서 목표
- ② 문화적 목표
- ③ 경제적 목표
- ④ 사회적 목표

[답] ④ 에치오니(A.Etzioni)는 복종의 유형과 권력의 유형에 따라 조직을 강제적 조직, 공리적 조직, 규범적 조직으로 구분하고 강제적 조직은 질서목표를, 공리적 조직은 경제적 목표를, 규범적 조직은 문화적 목표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목표는 해당되지 않는다.

□ 에치오니(Etzioni)의 조직유형

관여 권력	굴복적 복종	타산적 복종	도덕적 복종
강압적 권력	① 강제적 조직 (질서목표)		
공리적 권력		② 공리적 조직 (경제목표)	
규범적 권력			③ 규범적 조직 (문화목표)

10. 테일러(F.W.Taylor)의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테일러(F.W.Taylor)는 과학적 관리의 핵심을 개인적 기술에 두고, 노동자가 발전된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작업이 되도록 한다.
- ② 어림식 방법을 지양하고 작업의 기본요소 발견과 수행방법에 대해 과학적 방법을 발전시킨다.
- ③ 과업은 일류의 노동자만이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것 이어야 한다.
- ④ 노동자가 과업을 완수하는 경우 높은 보상, 실패하는 경우 손실을 받게 된다.

[답] ① 테일러(F.W.Taylor)의 과학적 관리론은 과학적 관리의 핵심을 개인적 기술이 아닌 수학적 공식과 같은 과학적 법칙과 기술에 두고 과학적 방법에 따라 작업이 되도록 관리한다.

- ☑ ② [O] 주먹구구식 (어림식) 방법을 지양하고 작업의 기본요소 발견과 수행방법에 대해 과학적 방법을 발전시킨다.
- ③ [O] 과업은 일류 노동자만이 달성할 수 있는 어려운 과업을 부여한다.
- ④ [O] 노동자가 과업을 완수할 경우 높은 보상(고임금), 실패할 경우 손실(저임금)을 감수하게 한다. 즉 작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산업현장에 최초로 적용한 관리이론이다.

11. 매트릭스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중의 명령 및 보고체제가 허용되어야 한다.
- ② 기능부서의 장과 사업부서의 장이 자원 배분권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조직구성원 간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 ④ 조직의 성과를 저해하는 권력투쟁이 발생하기 쉽다.

[답] ③ 매트릭스 조직이란 기능별 조직과 사업별 조직을 입체적으로 결합시킨 조직으로 기능별 조직의 전문성과 사업별 조직의 대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중구조 조직이다. 매트릭스 조직은 상명하복의 계층구조 형태를 띠는 기능별 구조가 존재하고 두 라인간 권력투쟁이나 역할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간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 매트릭스조직

기능구조 + 사업부제 = 균형 있는 이중권한구조	
장 점	단 점
① 기술적 전문성과 제품 라인의 혁신 동시 충족	① 명령이원화 → 갈등
② 능력발전·자아실현	② 권한 불균형시 제품 조직 or 기능구조로 전락
③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③ 부하의 불완전한 장악
④ 불확실한 환경에의 대응	④ 역할갈등 : 원만한 대인관계 저해
⑤ 분화 + 통합(체계론적 사고)	⑤ 신속한 결정 곤란

12. 파슨스(T. Parsons)의 조직유형 중 조직체제의 목표 달성기능과 관련된 유형으로 옳은 것은?

- ① 경제적 생산조직
- ② 정치조직
- ③ 통합조직
- ④ 형상유지조직

[답] ② 파슨스(T.Parsons)는 체제의 4가지 기능(AGIL)을 중심으로 조직을 경제적 생산조직, 정치조직, 통합조직, 형상유지조직으로 구분하였다. 목표 달성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유형은 정치조직이다.

□ 파슨스(Parsons)의 조직유형

체제의 기능	적응기능	목표달성기능	통합기능	형상유지
T.parsons의 조직의 유형	경제적 조직 (민간기업)	정치조직 (정당, 행정기관)	통합조직 (경찰, 사법기관)	형상유지 조직 (교회, 학교)

13.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15~35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 공무원처럼 시험을 통해 채용되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옳은 것은?

- 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 ②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③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 ④ 한시임기제공무원

[답] ③ 설문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개념에 해당한다.

- ☑ ① [X]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정규직으로 임용된 이후 중간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전환된 공무원을 말한다.
 ② [X] 임기제공무원 중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을 말한다.
 ④ [X]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 중 공무원의 휴직이나 병가, 특별휴가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을 말한다.

□ 임기제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종류

구분	개념
임기제 공무원	전문지식·기술 또는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경력직 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
	전문임기제공무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35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휴직, 휴가 등의 공무원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H ~ 35H)을 근무하는 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일반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임용 이후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된 공무원

14. 정부조직 개편으로 예산을 조직간 상호 이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원칙 중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인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예산의 전용
- ② 예산의 이체
- ③ 예산의 이월
- ④ 예산의 이용

[답] ②④ **[복수정답]** 설문의 전단인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조직간 예산의 책임소관이 변경되는 것은 이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후단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는 이체가 아니라 이용에 해당하므로 논란이 될수 있는 문제이다(당초 가답안에서는 ②를 정답으로 발표하였으나 이의제기 이후 최종적으로 복수정답처리되었다).

□ 예산집행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방안

구분	특징
재정통제	예산의 배정 배정 재배정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분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에게 예산을 다시 배분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통제
	정원·보수에 대한 통제 중앙인사기관장과 중앙예산기관장과의 협의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안편성준칙의 시달
	통합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총 망라하여 편성
	총사업비제도 2년이상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등에 대한 기재부장관과 사전 협의
신축성유지	이용 입법과목(장·관·항)간에 상호융통(국회의 의결을 요함)
	전용 행정과목(세항·목)간에 상호융통
	이체 예산의 책임소관 변경
	이월 다음 연도로 넘겨서 예산을 사용(명시이월·사고이월)
	계속비 수년간 예산지출(5년 이내)
	예비비 예산외의 지출 및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긴급배정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 추가로 편성된 예산
	준예산 예산 불성립 시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
	대통령의 제정에 관한 긴급명령권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
	총괄배정예산(지출대예산)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다년도예산 회계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3년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운영
	국고채무부담행위 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지출통제예산(총액계상예산제도)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지출
	장기계속계약제도 계속비제도에 더 신축성을 부여한 제도(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 계약)

15. 현대적 행정이념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주성
- ② 가외성
- ③ 신뢰성
- ④ 성찰성

[답] **[정답없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다. 출제자가 이 문제의 출제의도나 방점을 “현대”에 두었다면 ①의 민주성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②의 가외성(1960년말), ③의 신뢰성(1990년대), ④의 성찰성(1990년대)은 모두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한 행정이념인데 반하여 ①의 민주성은 1930년대 등장한 비교적 고전적인 행정이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현대”라는 개념이 언제 이후부터인지 시기적으로 애매하고 특히 ④의 성찰성(introspection)의 경우 아직 국내 행정학계에 완전하게 일반화된 행정이념이라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 대부분의 문헌에서 현대행정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①의 민주성을 현대행정이념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 정답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답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당초 가답안에서는 ①을 정답으로 발표하였으나 이의제기 이후 최종적으로 정답없음으로 처리되었다).

☑ ④ [O] **[가답안]** 성찰성(introspection)이란 포스트모더니즘의 언어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밖으로 표출되는 외면적 모습보다 삶의 본질적 모습이나 사회현상의 내면을 파헤쳐 보는 개념 또는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는 민주적 가치가 발전된 개념으로, 담론의 구성에 관여하며,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제와 상통하는 당위성 개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지식정보화사회나 후기사업사회를 중심으로 최근 일부(권기현 저, 행정학강의) 회자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현대행정의 이념으로 아직 국내행정학계에 완전하게 일반화된 행정이념이라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고 권기현 저 행정학강의에서도 “현대 행정이념의 우선순위로 21C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신자유주의 물결, 시민사회의 성장과 국민들의 참여욕구 분출로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에 돌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이념도 가외성, 신뢰성, 성찰성 등이 강조되고 있다”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이어 같은 책에서는 “본질적 행정이념으로서 성찰성(당위성), 민주성, 신뢰성과 함께 수단적 행정이념으로서의 효율성, 가외성 등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 맺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①의 민주성이 현대 행정이념이 아니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많아 보인다.

16. 윈터(S.Winter)가 제시하는 정책집행성과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형성과정의 특성
- ② 일선관료의 행태
- ③ 조직 상호간의 집행행태
- ④ 정책결정자의 행태

[답] ④ Winter(1986)는 정책집행을 정책형성과정과 연계하여 1) 정책형성과정의 특성과 정책집행과정의 특성인 2)조직상호간의 집행행태, 3)일선집행관료들의 행태, 4)정책대상집단의 행태 등 4가지 변수에 따라 정책집행성과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④의 정책결정자의 행태는 포함되지 않는다.

□ Winter의 정책집행모형

① 정책형성과정의 특성	인과모형, 갈등, 상징적 행동, 주의
정책집행과정의 특성	② 조직상호간의 집행행태
	③ 일선집행관료들의 행태
	④ 정책대상집단의 행태

17. 시·군 통합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의 대응성 제고
- ② 규모의 경제 실현
- ③ 생활권과 행정권의 일치
- ④ 광역적 문제의 효과적 해결

[답] ① 시·군을 통폐합할 경우에 광역행정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이 넓어져서 일선주민들의 선호에 대응하는 행정이 어려워진다. 주민 대응성은 공공선택론인 티부가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규모자치구역일수록 가능하다.

☑ ②③④ [O] 모두 자치단체 통폐합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광역행정의 긍정적 효과에 해당한다.

□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폐단

필요성	①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비절약 ②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해소 ③ 외부효과에의 대처 - 비용부담지역과 수혜지역 일치 ④ 도시화·산업화의 급속한 촉진 ⑤ 복지국가의 요청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균질화·평준화 - 지역 간 재정력 격차 해소와 National Minimum과 Civil Minimum의 조화 ⑥ 지방분권(민주성)과 중앙집권(능률성)의 조화
한계	① 지방자치(풀뿌리 민주주의)의 위협 ② 일상적인 기초단체 행정수요 경시

18. 진보주의 정부에서 선호하는 정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세 감면 확대
- ② 정부규제 강화
- ③ 소득재분배 강조
- ④ 소수민족 기회 확보

[답] ① 조세감면 확대는 진보주의 정부가 아니라 보수주의 정부에서 선호하는 정책이다. 보수주의는 가급적 조세를 축소하여 필요한 만큼만 재원을 확보하려는 입장인데 반하여 진보주의는 조세를 최대한 징수하여 소수민족 등 소외계층 배려를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시키려는 입장이다.

□ 진보주의 대 보수주의의 정부

구분	진보주의(좌파)	보수주의(우파)
인간관	·욕구, 협동,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인간 ·경제인관 부정(약자의 존재)	·오류의 가능성이 없는 인간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
가치관	·자유를 열렬히 옹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 정부에 의한 자유) ·결과의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부개입 허용	·자유를 강조 (간섭이 없는 소극적 자유, 정부로부터의 자유) ·기회의 평등과 경제적 자유 강조 (소득, 부 또는 결과의 평등은 경시)
시장과 정부에 대한 평가	·효율과 공정, 번영과 진보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 인정 ·시장의 결함과 윤리적 결여 인지 ·시장실패는 정부 개입에 의해 치유 가능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 ·정부불신, 정부는 개인자유를 위태롭게 하고 경제조건을 악화시키는 전체적 공포
활동	·소외집단을 위한 정책 ·공익 목적의 정부규제 정책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	·소외집단을 위한 정책 비선호 ·정부규제 완화와 시장지향 정책 선호 ·조세 감면 내지는 완화

19. 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스웨덴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 ② 행정 내부 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 ③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 ④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법부에 소속되어 있다.

[답] ② 옴부즈만(Ombudsman)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제일 먼저 도입된 제도로 국민들이 제기하는 불평·불만 등에 대해서 행정관찰관이자 호민관인 옴부즈만이 이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시정을 권고·건의하는 제도로 입법통제 등 외부통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제도이다.

□ 옴부즈만 제도

• 일반적인 특징

- ① 의회 소속
- ② 불법행위(합법성)는 물론 부당행위(합목적성)도 대상
- ③ 간접적 통제 : 무효·취소 불가
- ④ 직권에 의한 조사
- ⑤ 신속한 처리와 저렴한 비용 : 절차는 비공식적, 조사는 공개적으로
- ⑥ 독립된 헌법기관 : 입법부나 사법부도 통제의 대상

• 우리나라의 특징

- ① 헌법상 기관이 아닌 법률상 기관 - 조직상 안정성 부족
- ② 정부 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 - 내부통제
- ③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며 직권조사가 없다.
- ④ 입법·사법부 통제 불가

20.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지만 퇴직 공무원의 재임용의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한다.
- ② 전입은 국회·행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의 인사이동을 의미한다.
- ③ 고위공무원단이나 그에 상응하는 계급으로의 승진은 능력과 경력을 고려하며, 5급으로의 승진은 별도의 승진시험을 거쳐야 한다.
- ④ 국가직은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1급~2급에 해당하는 직위 모두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한다.

[답] ③④ **[복수정답]** 고위공무원단은 중앙부처 1급~3급 (실국장급)에 해당하는 직위를 하나의 인력풀로 묶어 범정부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제도로 개방형직위(20%), 공모직위(30%), 자율직위(50%)로 구성된다. 따라서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1~급에 해당하는 모든 직위를 민간에게 개방하는 개방형직위로 간주한다는 말은 틀린 표현이다

☑ ③ [X] 고위공무원단이나 그에 상응하는 계급으로의 승진은 능력과 경력을 고려하며, 5급으로의 승진은 별도의 승진시험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필요시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승진시험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③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수 있다. 과거 기출문제에서 지문 후단의 표현이 틀린 지문으로 처리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이 문제 역시 당초 가답안에서는 ③을 정답으로 발표하였으나 이의제기 이후 최종적으로 ③④ 복수정답 처리되었다.**)

□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승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다. 다만,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21.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괄예산제도
- ② 예산의 이용
- ③ 예산의 전용
- ④ 예산의 재배정

[답] ④ 예산의 재배정이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하급기관에 다시 예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이는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재정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 예산집행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방안

구분			특징
재정 통제	예산의 배정	배정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분
		재배정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에게 예산을 다시 배분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통제
	정원·보수에 대한 통제		중앙인사기관장과 중앙예산기관장과의 협의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안편성준칙의 시달
	통합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총 망라하여 편성
	총사업비제도		2년이상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와 사업기간 등에 대한 기재부장관과 사전 협의
신축성 유지	이용		입법과목(장·관·항)간에 상호융통 (국회의 의결을 요함)
	전용		행정과목(세·관·항)간에 상호융통
	이체		예산의 책임소관 변경
	이월		다음 연도로 넘겨서 예산을 사용 (명시이월·사고이월)
	계속비		수년간 예산지출(5년 이내)
	예비비		예산외의 지출 및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긴급배정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 추가로 편성된 예산
	준예산		예산 불성립 시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
	대통령의 재정에 관한 긴급명령권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
	총괄배정예산 (지출대예산)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다년도예산		회계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3년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운영

22.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인정하는 주민직접참여제도로 옳은 것은?

- ① 주민발안, 주민소환
- 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 ③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 ④ 주민소송, 주민총회

[답] ①③ **[복수정답]**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조례개폐청구, 주민소환 청구 등은 모두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 직접참여제도이다.

- ☑ ① [O] 가답안에서는 이를 틀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발안제도의 일종인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출제자가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제도라는데 방점을 두었다면 주민발안이라는 용어를 「지방자치법」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틀리다고 볼 소지도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서 공식적으로 주민발안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를 주민발안(간접발안)의 일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이 문제 역시 당초 가답안에서는 ③만을 정답으로 발표하였으나 이의제기 이후 최종적으로 ①③ 복수정답 처리되었다).
- ② [X]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법이 아닌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 ③ [O]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조례개폐청구, 주민소환 청구 등은 모두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 직접참여제도이다.
- ④ [X]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총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제도이다. 주민총회는 주민 모두가 직접 참여하여 지방의 중요한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방식이다(일본의 정촌총회, 미국의 open town meeting 등).

□ 우리나라의 주민 직접참여제도(지방자치법)

제도	연도	근거법률
주민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주민발의제도)	1999	지방자치법
주민투표제도	2004	주민투표법
주민소송제도	2006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제도	200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3. 엽관주의 인사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확보
- ② 행정의 공정성 확보
- ③ 국민의 요구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 향상
- ④ 유능한 인재 등용

[답] ③ 엽관주의는 정치적으로 승리한 정당이 정치적 보상에 따라 고위관료를 임명하는 제도로 정치와 행정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민주적인 인사제도이다. 따라서 정권교체라는 방식으로 국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책임성과 대응성을 요구할 수 있는 인사제도이다.

□ 엽관주의의 장단점

장 점
① 정당정치 및 민주주의 발달에 기여 ② 평등이념 구현 - 한정된 공직 널리 개방 ③ 관료제의 쇄신 ④ 정치적 리더십 강화 ⑤ 정책변동에 대응 유리 ⑥ 정부관료제의 민주화 : ⑦ 민주성·대응성·책임성 제고
단 점
① 정치적 중립 저해 : 정당의 사병화 - 공익의 저해 ② 행정의 안정성 저해 ③ 비능률·무질서·낭비·부패·무능 ④ 임용의 공정성 상실

24. 정책유형별 사례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성정책 : 국경일의 제정, 정부기관 개편
- ② 보호적 규제정책 : 최저임금제, 장시간 근로 제한
- ③ 추출정책 : 조세, 병역
- ④ 분배정책 : 보조금, 사회간접자본

[답] ① 정부기관 개편은 Lowi가 분류한 구성정책이지만, 국경일의 제정은 구성정책이 아니라 Almond & Powell이 분류한 상징정책에 해당한다.

□ 정책의 유형

• Almond & Powell의 정책유형

상징 정책	정치체제의 정당성 및 국민통합을 위한 이미지 정책	동상, 공권, 스포츠, 축제, 국기, 국화 등
추출 정책	환경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동원 정책	정세, 징집, 물자수용 등
분배 정책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득·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도로, 공원 등 SOC 건설, 보조금 등
규제 정책	개인·집단의 행동에 제약과 통제를 가하는 정책	진입규제, 가격규제, 안전규제, 환경규제 등

• Lowi의 정책유형

구분	개념	예	특징	주도
구성정책	행정체제 정비	정부기관 신설	게임의 법칙	정당
배분정책	서비스 배분 (개별화 정책)	SOC, 보조금 등	포크베럴, 로그롤링	의회
규제정책	제약과 통제	진입규제, 독과점규제	다원주의 (포획, 지대추구)	이익 집단
재분배정책	부의 이전	사회보장정책	엘리트이론	엘리트

• Ripley & Franklin의 정책유형

	루틴화	관계 안정성	반발과 감축압력	원만한 집행
분배정책	용이	높음	낮음	용이
경쟁규제	보통	낮음	보통	보통
보호규제	곤란	낮음	높은 편	보통
재분배정책	곤란	높음	높음	곤란

25.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유관 단체에는 공기업이 포함된다.
- ② 재산등록의무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 ③ 등록할 재산에는 본인의 직계존속의 것도 포함된다.
- ④ 등록할 재산에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것은 제외한다.

[답] ②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는 5급이 아니라 4급이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 ① [O]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 포함된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안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등

③④ [O] 등록할 재산에는 직계존속의 것도 포함되나 혼인한 딸은 제외되므로 맞는 지문이다.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이다.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

□ 재산등록대상자와 공개대상자

	등록대상자	공개대상자
정무직	전원	전원
일반직 별정직	4급 이상 (상당 별정직)	1급 이상 (상당 별정직)
법관·검사	모든 법관 및 검사	고법 부장판사 이상 대검 검사급 이상
군인 등	대령 이상의 장교	중장 이상의 장교
경찰소방	총경, 소방정 이상	치안감, 소방정감 이상
공공기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상임이사·상임감사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기타	세무, 회계, 감사, 검찰사무,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의 대민업무 등의 7급 이상 5급 이하	